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과 4+1 예산안 담당자들과 회담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혜철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유상엽 대안신당,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여야 4+1 회동...한국당 제외

이인영, '패트' 공조 펼쳤던 野와 협의체 가동

한국당에 "협상의 문 열어놓겠다" 여지는 남겨

더불어민주당이 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에 나섰던 야당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 다만 자유한국당에도 협상장의 문은 계속 열어두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국당에 전달 저녁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라고 최후통첩을 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가동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1 협의체 가동 결정을 내렸다.

홍일표 수석대변인은 "당초 앞서 결정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1 협의를 시작해 본격적으로 예산안을 중심으로 민생법안, 정치·사법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에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공식 제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예산 심사를 총괄할 전혜철 의원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실

무협상 담당자인 김종민 의원을도 참석했다. 여야 3당 협상 테이블뿐 아니라 4+1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위한 사전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장 이날 4+1협의체에서 예산안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매우 시급하고 시간이 실제 얼마 남지 않았기에 오늘 오후 2시 예산안 담당자만큼은 먼저 회동할 수 있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전혜철 의원이 예산안 논의를 담당한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민식이법, 유치원 3법과 같은 민생입법,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처리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해선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으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의 안을 갖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선거법 논의에 들어가면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정속도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전체 이해를 조정해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불발되는 것이기에 특정한 안을 갖고

(협상에) 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4+1 협의체 가동을 시작하지만 한국당과의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기로 했다. 한국당이 원내지도부를 교체하기로 한 만큼 막판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온다고 하니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다"며 "태도 변화가 없다면 기존의 방침대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이 "메인트랙을 4+1로 경부선을 가다가 (한국당과의 협의에서) 울산으로 빠질지 말지는 그때 논의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4+1협의체 가동에 나선 것은 한국당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는 어떤 면에서 버스가 떠나야 할 시간이 임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과 입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 창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동시에 한국당에 대한 압박용으로도 해석된다.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법안 뿐 아니라 예산안까지 처리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서울=김윤호 기자

## 나경원 '연임 불가' 한국당 최고위 겨냥 비판 목소리

정진석 "이런 경우 처음봐" 홍일표 "권한 없는 일 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 불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최고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 원내대표의 연임문제는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최고위가 결정한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4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의원총회에만 있다"며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가 나서서 임기연장을 불허한 것은 권한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당규를 종합해보면 당 대표의 권한은 (원내대표) 선거일을 정하는 절차상의 권한일 뿐이고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결정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

라고 보인다"며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도 황 대표를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 천막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앞서 박완수 사무총장 등에게 "일을 왜 만드는가. 이런 경우는 정치를 20년 하면서 처음 본다. 너무하다는 것이다"며 "대표와 원내대표는 비판받으면 안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최고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임기 연장 여부를 묻지 않겠다고 밝힌 뒤 김태을 의원은 공개 발언을 요청해 최고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어제 최고위가 의

결한 내용(연임 불가)은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연임이나 경선 결정은 의원총회에 권한이 있는데 너무나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가 옳다고 보는가. 이게 살아있는 정당인가"라며 "어떻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독재, 국회의장이 함부로 유권해석을 해서 국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일 공고하는 부분을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적용해 이 부분(연임 불가)을 최고위가 의결한다는 건 웃긴 이야기"라며 "이 문제에 대해 (최고위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임기 연장, 경선 결정 권한을 다시 의총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 이후 공개 발언을 하겠다는 목소리가 의총장 곳곳에서 나왔지만, 한국당은 공개 발언을 막고 비공개로 전환했다.

## 나경원 "원내대표 여기서 멈춘다...당의 승리 위한 결정"

의총서 "임기 연장에 대해 묻지 않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3일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당 최고위원회가 전달 자신에 대한 '연임 불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나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원총

회에서는 임기 연장에 대해 묻지 않겠다"며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오직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의 발전, 당의 승리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한국당 원내대표로 보낸 시간은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동지애로 가득한 1년이였다. 눈물과 감동의 시간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독선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온몸을 던진 위대한 저항의 역사였다.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면서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위한 그 어떤 소명과 책무는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시는 국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당직자와 보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에 있고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며 "자유한국당은 흔들리거나 멈춰서는 안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